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한일, 북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Online Series

2021. 10. 01. | CO 21-28

이 기 태 (평화연구실장)

지난 9월 29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자민당 총재가 사실상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일본은 제100대 기시다 내각총리대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일본정치의 특징인 ‘파벌’ 정치가 여전히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차기 기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자민당 최대 파벌을 영향력에 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적용되어 당분간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향후 실시될 일본의 국정선거(2021년 중의원, 2022년 참의원) 결과와 기시다 정부 내 정책결정과정에서 따른 정책변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한 ‘신뢰’를 중시하는 기시다 총재를 상대로 한일관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기반한 한일 안보협력 대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9월 3일, 자민당 당직자회의에서 29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선거에 불출마하기로 밝혔다. 당초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연임 도전이 예상되었지만 연이은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를 선거 간판으로 내세워서는 11월로 예정된 중의원 총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자민당 내 기류가 확산되었고, 결국 스가 총리는 사임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위원장(이하 ‘정조회장’), 고노 다로(河野太郎) 행정개혁담당상(이하 ‘행정개혁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총 4명이 총재후보로 나섰다. 그리고 9월 29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고노 행정개혁상을 이기고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결정되었으며,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의원내각제 특성상 이변이 없는 한 10월 4일 열리는 임시국회를 거쳐 일본 제100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 헌법개정문제, 안보문제와 같은 대내외 현안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 활발한 정책토론이 전개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작년 스가 총리의 당선 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여론과 괴리된 자민당 내 파벌 간 역학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 본 글에서는 기시다 자민당 총재를 결정한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 및 평가, 기시다 정부에서의 한일관계, 북일관계 전망, 향후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한다.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여전히 강력한 파벌정치 구도

9월 29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표(382표)와 전국 당원 및 당우(黨友) 투표로 배분되는 당원표(382표)로 실시되었다. 1차 투표 결과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256표(의원표 146표, 당원표 110표)로 255표(의원표 86표, 당원표 169표)를 획득한 고노 행정개혁상을 1표 차로 앞서며 1위를 차지하였다. 국민들의 인기가 높은 고노 행정개혁상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결과는 개혁 성향의 고노 행정개혁상을 견제하려는 당내 보수세력의 결집이 이뤄졌음을 나타냈다. 결국 1차 투표에서 과반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치러진 1, 2위 간 결선투표에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총 257표로 170표 획득에 그친 고노 행정개혁상을 이기고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선거 전부터 아베(安倍晋三) 정치를 비판하는 고노 행정개혁상을 지지하는 세력과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 하에 있는 보수세력 간 대결로 압축되었다. 즉 고노 행정개혁상은 아베 정치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상, 스가 총리의 지지와 높은 국민적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를 필두로 한 보수파 중심의 파벌정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반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당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강한 아베 전 총리가 선거 과정에서

보수우파 성격을 가진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하면서 위기도 있었지만, 결선투표에서 기시다-다카이치 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무난하게 승리하였다. 결국 향후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베 정치 유산으로부터 단절하지 못하고, 자민당 파벌정치 구도의 견재 속에 아베 정치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임을 총재선거 과정은 보여주었다.

사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당내 다수의 유력 파벌이 지금까지 파벌 내에서 특정한 단일 후보를 지지했던 투표행태에서 벗어나 파벌 소속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다가올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의 간판을 의원들의 자유의사로 선택하게 해달라는 초재선 중심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면서 기존 파벌정치의 역학관계가 그대로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의원 선거 승리를 염두에 둔 자유투표가 강하게 반영될 것인지가 총재선거의 전반적 구도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예상 외 1차 투표 승리는 자민당 의원들이 여전히 파벌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카이치 전 총무상에 비해 온건보수로 인식되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을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 중의원 총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인식도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영향 하의 보수본류 후계자 기시다

기시다 총재는 전후 요시다 노선(Yoshida Line)으로 대표되는 보수본류(保守本流)의 정통 후계자임을 자임한다. 보수본류 세력은 2000년대 이전까지 자민당 정권의 주류를 이룬 세력이며,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고 방위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기시다 총재가 파벌 영수로 있는 보수본류 노선인 고치카이(宏地会)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주변 아시아국가와의 외교도 중시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총리로 이어지면서 보수우파(보수방류, 保守傍流) 세력이 집권하였는데 이들은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내셔널리즘, 역사수정주의, 자주외교를 표방하면서 중국, 한국 등 이웃국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의 탄생은 표면적으로는 보수본류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기시다 총리의 언행은 결국 기존의 아베 노선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을 갖게 한다. 특히 기시다 총재가 기존 보수본류에서 벗어난 모습은 총재선거 과정에서 ‘헌법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자민당은 2018년 3월, ① 자위대

근거규정의 명기, ② 긴급사태조항 신설, ③ 참의원 선거의 합구(合區·선거구 통폐합) 해소, ④ 교육충실 등 4개 항목의 개헌안을 정리하였다. 기시다 총재는 4개 항목의 개헌안을 만들었을 때 정무조사 회장이었는데 총재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그 어느 것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후보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개헌시기에 관해 ‘차기총재 임기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시다 총재의 개헌에 대한 적극적 자세는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속한 최대파벌인 호소다파(細田派)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2021년 11월 중의원 선거, 2022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될 것이다. 만일 기시다 정부가 2개의 국정선거에서 모두 승리하게 된다면 안정된 정권 기반을 구축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주도하는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 2개의 국정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전임인 스가 총리처럼 단명 정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한일관계와 북일관계 전망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의 한일관계는 기존 아베-스가 시기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시다 총재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당시 아베 총리를 대신해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재는 자신의 저서 ‘기시다 비전(『岸田ビジョン』)’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강제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스가 정부가 한국 측의 합의 이행 및 선제적 해결책 제시를 주장한 것처럼 기시다 정부 역시 기본 방향에서는 아베-스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재 역시 9월 24일 총재선거 토론회에서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해서 한국 측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기시다 정부는 당분간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정책 등 국내문제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11월 중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극적인 한일관계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재가 ‘기시다 비전’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에서 일본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안보 현안에서 중시하는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염두에 둔 대한국 접근 가능성도 있다.

북일관계와 관련해서도 기시다 총재는 아베-스가 노선을 그대로 계승할 것을 표명하였다.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선거토론회 과정에서 기시다 총재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회담을 비롯해 여러 수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아베-스가 총리 입장과 유사하다.

한편 기시다 총재는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미사일 방위체제에 관한 검토를 모색하고 있고, 최근 수년 동안 일본 내에서 논의되었던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도 제2차 공격 준비 차원에서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월 18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자민당총재선 후보자 공개토론회).

기시다 총재는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 출신으로 원래 ‘비(非)핵’, ‘평화국가’ 일본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낸다. 하지만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을 경험하면서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핵문제 대응을 피력하고 있다. 2020년 출판된 기시다 총재의 저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核兵器のない世界へ』)’를 살펴보면 기시다 총재는 미국에 의한 확대억지전략의 강화, NPT 체제 유지 등을 ‘기시다 이니셔티브’로서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본인도 평화세력이 주장하는 ‘핵 없는 세상(核のない世界)’이 아닌 ‘핵무기 없는 세상(核兵器のない世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강조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현실주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록 기시다 총재는 핵문제에 대해 ‘비핵’, ‘평화’를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미일동맹 강화 및 NPT 체제 유지에 기반을 둔 강력한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응방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나타난 일본정치의 현실과 향후 기시다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정치의 현실 및 기시다 총재의 인식, 이념 분석을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한일 위안부합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재가 반한 감정이 강하다는 국내 일부 분석은 피상적인 분석에 불과하다. 비록 기시다 당시 외무상이 한일 위안부합의에 서명하였지만 사실 한일 위안부합의는 한일 양국의 청와대와 관저주도의 정책결정과정이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책결정과정 및 이를 둘러싼 일본 국내 현실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기시다 총재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인식 및 이념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에 기반한 한일 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동맹국을 가지고 있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위협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한·미·일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시다 총재의 북핵 문제 관련 대북정책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NPT 체제 유지에 기반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 대화를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시다 총재의 비핵, 평화국가 일본이라는 정책이념을 한국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시다 총재가 외교정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신뢰’ 구축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양국 정부에 요구된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